

제47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

2016. 6



1. 개 요

□ 목 적

- 중국 경제·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,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

□ 일 시 : 2016년 6월 29일(수) 10:00~12:00

□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
□ 주 제 : 「중국 경제·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」

□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0:00~10:05	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05~10:10	발표자 소개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김명신 박사 (KOTRA 해외프로젝트사업단)
10:50~11:30 (40분)	패널 소개 및 지정 토론	(좌장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
11:30~12:00 (30분)	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주제 발표 주요 내용

□ 발표 주제 : 중국 경제·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

[발표자: 김명신 박사 (KOTRA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차장)]

- 서비스 위주로 경제 성장 방식 전환
- 중국은 알리바바(세계 2위 IT기업), 샤오미(세계 2위 벤처기업) 등 보유
 - 성장방식 전환 과정 중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, 일자리 창출은 양호
 - 경제성장률 6%대의 중성장시대 진입
 -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가 5년 연속 목표치(연간 1,200만명) 상회
 - 수치적인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
 - 외부경제의 영향에 취약한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해 경제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노력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선언했으나 내수확대를 위한 전반적 여건 형성(1인당GDP 3천 달러) 및 가시적 변화(3차 산업이 국민경제 최대산업으로 부상, 여행 등 서비스소비 급증)가 나타난 것은 2013년 이후
 - * 중국의 1인당 실질 GDP : 3,166달러('08)→5,155달러('13)→8,016달러('15, 1인당 명목 GDP)
 - * 산업비중 : 2차 산업 비중 하락('08) → 3차 산업비중(46.1%)이 2차 산업(43.9%) 초과('13) → 3차 산업비중이 전체의 50% 초과('15)
 - * 해외여행객 : 4,584명('08) → 9,819만명('13) → 1억2천만명('15)
- 제조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제조강국으로 전환
- 13.5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\$10,000 달성 목표
 - 소비다문화, 자기표현욕구 증가 등 정치적 변화 예상

- 2025년까지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 독일, 일본수준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선도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 수립(중국제조 2025 계획)
 - * 10대 중점분야 : 차세대정보기술, 고급디지털공작기계·로봇, 항공항천장비, 해양공정설비·고기술선박, 선진케도교통장비, 친환경신에너지자동차, 전력장비, 신소재, 바이오의약·고성능의료기계, 농업기계장비
 - *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미국(=100) 대비 60%선(국무원발전연구센터 魏際剛 애널리스트)
- 이를 위해 R&D에 대거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집중
 - * 구매력기준 전세계 R&D 총지출 비중 : 미국(27%), 중국(20%), 일본(10%), 독일(6%)
 - * R&D 자금의 분야별 지출비중 : (중국) 기초연구(5%), 기술개발(84%) / (미국) 기초연구(17%), 기술개발(62%)
- 모바일인터넷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조업과 접목해 산업구조 개선한다는 목표 수립(인터넷 플러스 전략)
 - * 중국의 IT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정책 의지에 따라 제조업과 빠른 융합 예상
-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해 전사회적 활력 제고와 혁신분위기 조성 주력

- 잠재리스크 해소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
- 가계부채는 30%대, 정부부채 41.5%로 EU집행위 기준 건전한 상태이나, 기업부채가 131%로 높음
 - 하지만 총부채 212%는 정책적(금리 등)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
 - 세계무역 전체 파이는 줄어들면서 중국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
 -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제조업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나 경제체질 개선은 진통 예상
 - 서비스 위주의 경제성장동력의 전환은 이미 속도를 내고 진행중
 - 제조업 혁신은 일부 산업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어 무난한 달성 예상

-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, 전체 수는 일정한 반면 대졸자 수는 증가
- 대졸 취업난의 심화는 사회문제화 우려됨
-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 노력
- 경제발전은 낙관적이나, 사회불평등, 대졸취업난, 국민의 정치적 욕구 등이 변수임

- 우리나라는 일본을 공부하여 중국시장에 적용해야 함
-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: 절치부심을 통해 내실을 쌓는 계기
- 일본은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중국 진출이 어려우나, 우리나라는 일본을 배워 기술혁신을 이룩하면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창출이 가능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[패널(학): 김동하 부산외대 교수]

- 중국은 장비를 사고 조업기술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여 빠르게 추격가능한 장치산업(철강, 화학 등)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함
- 늘어나는 중산층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
- 중국 경제가 6%대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향후 성장을 지속해 세계 최대 경제 및 소비 국가로 성장 할 것임
- 도시화를 제고에 따라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으며, 2022년에는 상류층과 중산층을 합한 비중이 63%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GDP \$10,0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대도시와 농촌의 큰 차이가 존재
- 인구의 절반(7억)은 농민으로, 아직 구형 가전제품과 같은 대도시와는 다른 수요가 존재

- 4 -

- 이러한 층차적 변화에 한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음

- 교육 육구의 상승
- 중국의 고졸자는 연간 1,000만명이나, 대학정원은 400만명
- 과거에는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되었으나, 농촌소득증대와 위안화가치의 상승에 힘입어 한국 등으로 유학을 떠남

[패널(연):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]

- 향후 수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과 국내 구조개혁의 영향으로 추세적인 성장 둔화 예상
- 단,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대외개방도가 낮고,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나 급격한 성장세 하락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
-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해외진출 확대에 의해 한중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구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
-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기술격차 축소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대체 및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,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에 따른 제3국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 필요
- 무역특화지수를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며, 중간재는 수입대체 단계에서 수출산업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
-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산업정책(중국제조 2025, 인터넷+), 환경보호 강화, 도시화, 인구구조 및 주력소비층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될 신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공급능력 강화 필요

- 5 -

[패널(산):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]

- 한중일 분업체제는 변화하고 있으나, 신산업 대응전략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중국, 일본에 비해 늦음
- 소비 주도의 내수 성장이 진행되나, 구조적 리스크 해소는 지연
 - 3월에 열린 양회에서 제기된 공급개혁은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- * EU(2016)에 따르면, '14년 현재 '08년보다 중국의 설비가동률이 하락: 철강(79.5%→71.3%), 전해알루미늄(72.9%→75.9%), 시멘트(75.9%→72.6%), 정유(80.3%→66.5%), 평판유리(88.3%→79.4%)
 - * 기업 부채문제도 심화: BIS에 근거, 2015 2/4분기 현재 중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(43%), 기업부채(163%), 가계부채(38%) 등으로 추정됨
 - *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(취득세, 주택담보대출 선납기준 하향)로 경기는 1선 도시 중심으로 회복이 가속되나, 차후 2·3·4선 도시 회복 여부에 따라 부동산 재고 문제 해소 기대
 - 중국의 고속성장은 국유기업의 성장에 기반
 - 높은 기업부채(131%)는 경시해선 안됨
 - 공급관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함
 -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주시해야 함
- 중국 중서부 시장에 집중해야 함
 - 중국 동부 시장은 포화상태
 - 중서부의 인프라 개발 투자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야 함
 - 국유기업 독자 개발에서 합작개발로 바뀌어가는 추세임
 -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

4. 자유토론 주요 내용

- 국유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부채 risk, 지역별 경제격차와 소수민족 문제 등은 중국의 2가지 뇌관으로 생각됨. 연사의 견해는?
 - 중국은 기업과 토지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크므로 부채에 관한 문제는 기업과 은행에 대한 통제력으로 대응가능
 -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잠재 리스크 해소는 추진과정 중 일부 진통 예상
 - 과잉생산,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세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번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
 - 감세조치는 중국정부의 재정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추진 예상
 -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정부의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통제 가능하나 근본적 해결에는 부채규모와 해결방식을 고려할 때 장기화 예상
 - 부채문제 해소를 강도높게 추진할 경우 경제비효율과 투자둔화에 따른 경기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
- 대중 수출의 대부분은 부품소재인데, 중국 제조업 혁신에 우리의 대응방안은? 중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책은? 실리콘밸리와 다르게 중국은 정부의 drive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창업이 활발한지?
 - 기술혁신과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는 등 혁신만이 방법
 - 경기가 안좋아 보호무역은 더 심해질 것
 - 중국인의 상인 기질에 따라 창업의 동기부여가 크고, 시장이 큼
 - 한-중 FTA 협상 등에 있어 지엽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유사한 문제들을 묶어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
 - 중국은 자신있는 산업은 개방, 그렇지 않은 산업은 강력히 보호
 - 각 기업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